



금속노조 '박근혜 퇴진 총파업' 가결! 기아차지부 79.1% 압도적 찬성! 김성락 집행부는 11·30 총파업 지침을 이행하라

지난 주말,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에 서울 150만, 전국 190만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2주 만에 1백만 명을 넘었고, 26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것이다.

운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박근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박근혜 지지율은 4퍼센트다. 중도 퇴진 지지가 80퍼센트가 넘는다. 그리고 결국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하나(검찰)가 박근혜에 반기를 들게 만들고, 여권 내 분열을 앞당겼다. 자신을 얻은 야당은 국회 탄핵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의 가장 선두에 서 왔던 조직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와 기대도 상당하다. 조직 노동자들은 이 운동에서 환영 받는 존재다. 연단에서도, 행진에서도, 조직 노동자들은 26일도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행진을 이끌었다.

61일째 파업을 하는 철도 노동자는 자유발언대에서 소개만 받아도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의 11월 30일 박근혜 퇴진 파업도 곳곳에서 관심과 지지의 대상이었다.

즉각 퇴진

26일 집회의 대성공은 역설적으로 이를 국회와 제도 내 절차로 안고 들어가려는 주류 정당들의 국회 탄핵 절차를 앞당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즉각 퇴진' 요구와 상충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있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여론의 중심이 거리에서 국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탄핵을 하려면 새누리당의 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박근혜 악행의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새누리당이 탄핵



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옳지만, 야 3당 공조로 탄핵에 합의한 것이 이미 문제의 씨앗이었다.

둘째, 국회 탄핵으로 즉각 퇴진 요구를 희석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박근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박근혜의 중도 퇴진이나 온갖 개악의 철회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권한 정지로 체면을 세워 주도권을 강화하고, 최종적인 사태의 책임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현재에 넘겨 버리려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박근혜 임기가 길어지고 반박근혜 반감이 유지되는 것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속내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런 야당에 기대지 말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함께 걸고 파업에 나서자

박근혜 퇴진 운동을 강력히 만들려면, 단지 그의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반노동자·민중 정책, 친제국주의 정책, 민주적 권리 공격 등에 반대하는 기층의 운동이 강력해져야 한다.

야당들의 손안으로 운동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박근혜의 온갖 못된 짓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되돌려 놓아질 것이다. 특히, 시장 지향의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거의 손도 안 댈 것이다. 민주당 등이 와중에도 철도 파업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라.

특히 이번 주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이 중요해졌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노동개혁 폐기,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우리의 요구를 걸고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디딤돌 삼아 파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퇴진 운동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도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총투표에서 조합원 70.26퍼센트가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기사차지부는 찬성률이 79.1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한국지엠

지부도 84.4퍼센트의 지지가 나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성락 집행부가 "대의원 투표 시간을 활용해 민주노총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는 기만적인 결정을 내렸다. 김성락 지부장은 21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총투표가 가결돼도 파업 지침은 이행하지 않고 "복무"하겠다'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원팔인 기사차지부 지도부가 조합원 투표 결과까지 무시하며 행동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민주노총의 파업에 힘을 빼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에 따라 30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온전한 8+8 시행,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걸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할 때다. (▶ 뒷면 참조)

활동가·대의원들은 이를 촉구하며, 파업 집회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



신규채용 합의 거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 화성분회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지난해 입투에서 약 3백만 원의 성과급 차별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더 심각한 임금 차별을 받았다. 분회 조합원들 사이에서 원성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총무성 업체라는 이유로 여성이 절대 다수인 청소·식당 조합원들은 이번에 성과급이 1백30여 만원이 나 삭감됐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사측은 현대푸드 조합원들더러 '연봉 5천만 원 받는 노동귀족'이니, '현대 백화점의 계열사'니 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많은 분회 조합원들은 지금 사측과 지부 집행부 등이 합의한 신규채용안에도 치를 떨고 있다. 이 합의안은 '모

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오랜 요구를 저버린 채, 4천5백명 중 고작 1천명 만을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하는 내용이다.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그동안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일부 선별 채용으로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지금 잘못된 합의와 임금 차별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규채용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화성분회 김수억 분회장을 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적반하장

더욱이 집행부는 신규채용 합의를 자화자찬하며, 사측의 악의적 선동

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식당·청소 총무성 도급까지 전원 정규직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1천49명 정규직화 성과를 만들어 냈다" (11월 21일 지부 <함성소식>)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는 사실 자체로도 왜곡이다. 집행부는 총무성 업체를 제외한 전원이 신규채용 되는 것처럼 은근히 포장을 했지만, 신규채용에서 제외된 3천5백 명 중 다수는 총무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더구나 둘째, 이는 식당·청소 조합원들과 직접생산라인 조합원들을 이간질하는 사측의 악의적 선동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있다. 사측이 '총무성 조합원들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가로막혀

있다'고 악랄한 이간질을 퍼붓고, 조장(파트장) 협의회가 분회 분리를 주장하는 서명판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분리 책동에 강력히 항의하며, 총무성 조합원들을 포함해 전원 정규직 전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화성분회 김수억 집행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전국을 들끓고 있는 지금, 기아차 불법파견 2심 소송 결과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는 8+8 개악 협상 중단하라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현장 조합원들은 지금 당장 8+8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입투가 진행된 3개월간 잔업 없이 근무하며 8+8 시행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8+8이 누더기가 되는 것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지난 4월 8+8 개악안 잠정합의가 사상 최대의 반대(화성은 무려 85퍼센트 반대!)로 부결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잠정합의안은 휴일 축소, 단협 개악,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었다. 그리고도 생산량이 만회되지 않는다며, 휴식시간 없이 주간·야간 잔업

을 각각 20분, 10분씩 연장했다. 이에 더해 중식시간을 30분으로 축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이런 조합원들의 열망은 아랑곳 않고, 사측이 요구하는 생산량 보전에 중점을 둔 8+8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던 이유를 제멋대로 왜곡한 지부·지회 <함성소식>을 보면 정말이지 천불이 난다.

개똥 + 고양이똥

집행부는 한 마디로, 4월 잠정합의안이 월 임금 3만 6천 원을 보장받지 못했고, 중식시간 30분이 축소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제 월 3만 6천 원을 더 받기 위해, 다시 단협 개악, 1.2 UPH UP, 잔업 연장(예상 퇴근시간 24시 40분), 조기 출근(6시 50분)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4월 개똥 같은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조합원들에게, 이제 '개똥 + 고양이똥'을 얹어서 먹으라는 것이다!

김성락 집행부가 거듭 8+8 시행의 조건으로 노동조건 후퇴를 전제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생산량을 보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량을 보전해 주면서,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

해 8+8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8+9시행 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김성락 집행부는 더 이상 사측의 생산량 보전 논리에 빠져 조합원들의 열망을 배신해선 안 된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8+8 시행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양보 협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박근혜 퇴진 요구를 함께 걸고 파업과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